

제13장 사회운동

일본의 사회운동은 일본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 한때는 일본의 사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본사회의 변혁세력이라고 자부하였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혁신세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였고,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일본의 사회운동은 이념과 당파에 따라 크게 갈라져 있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오늘 일본사회의 사회운동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전후 일본사회의 변동을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60년 안보(安保), 기업별 노동조합, 유니온 아이덴티티, NC ND, 소효, 렌고, 배헤렌, 전공투 무당파, 비핵 삼원칙

1 전후 사회운동의 개관

1945년 8월 15일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하자, 일본의 진보적인 정치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이 일제히 거대한 변혁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946년에는 일본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타도와 혁명정부의 수립을 위해 쟁기하였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일본공산당의 지도하에 전개되었다. 1947년 2월에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총파업을 준비하였다. 미점령군사령부(GHQ)가 총파업금지령을 발령하여 총파업은 중지되었다. 전국의 대학에서도 학생운동이 일어나 1948년 9월에는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회(전학련)이 구성되었다. 비록 미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일본의 사회운동은 혁명적인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1949년에는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점령군사령부에서는 대대적인 레드퍼지(공산당사냥)를 전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일본의 사회운동은 양분되었다. 급진적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진정되고 실리추구적 노동운동이 정착하게 되었다. 1955년에는 일본공산당이 종래의 투쟁을 <극좌모험주의>로 몰아붙이고 당의 통일을 선언하였다. 한편 의회에서는 보수계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하여 자유민주당을 결성하고, 분열된 사회당이 재통합하여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이 자민당 대 사회당이라는 구도는 이른바 55년체제로서 1990대까지 지속되었다.

전후의 대중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이 주류를 이루어 전개하였으나, 부인운동, 문화운동, 지식인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잇달아 전개되었다. 1955년 이전에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일본의 재무장화를 진행하고 냉전체제 하에 편입되어 전후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이 형해화 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지키겠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대중운동이 발생하였다. 지금도 일본의 진보운동에는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호헌운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지도한 것은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이러한 혁신정당과 연관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었다. 1960년 일본의 자민당정권이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고 그것을 연장하려고 하자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안보조약반대운동도 일본의 혁신정당이 주도하였다. 동시에 안보투쟁에서는 ‘혁신국민운동’에 가까이 하면서, 혁신정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립하여 행동하는 무수한 작은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60년안보투쟁에 있어서 ‘소리없는 소리의 모임’의 운동은 그 것의 전형이다. 안보반대투쟁은 혁신운동의 패배로 끝났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노동조합운동, 혁신정당운동에서 실망한 전후민주주의의 '이상주의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 일본의 혁신세력은 전후초기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혁에 꿈을 두었지만, 이른바 '55년체제'가 완성되고 공산당의 체제내 안주, 독선적인 지도체제의 확립에 실망하여, 탈당하거나 출당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1960년의 미일안보투쟁에서도 가담하였지만, 역시 실패하고, 일본의 대중들이 고도성장의 파도를 타고 있을 때, 그들은 운동을 떠났다. 그러나 이 세대는 이미 나이가 70가까이 되어, 운동의 주력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전개되었던 대학분쟁의 주역인 켄교토 세대가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저변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의의제기에서 출발하였지만 모든 기존 권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좌파 정당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의 폐해를 시정하고 생활세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은 여전히 중앙정부나 자치체가 무시할 수 없는 발언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간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노동운동의 개량화에도 불구하고 의의제기를 계속하는 소수와 노동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운동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별로 쟁점화를 주도한 세력과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실리추구형 노동운동의 정착

전후에 일본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사회적 쟁점도 바뀌어 왔다. 시기에 따라 사회운동의 주체, 목표,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패전 직후의 생존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시대 상황에서 전개되었던 사회운동의 중심은 계급운동의 성격을 가진 노동운동이었다. 전후 복구가 완료되고 보수정권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성장으로 풍요한 사회가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 이후에 들어와서는 노동운동이 대변하지 못하는 불만과 고충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다.

일본의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운동이 전후에 걸어온 역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미군정기에 활성화된 급진적 노동운동은 냉전과 함께 반공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령정책이 전환되는 역코스를 겪으면서, 대규모 해고, 공공부문의 쟁의권 박탈, 모든 단체협약의 무효화라는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1950년에 미군정의 후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전국 조직인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반대하게 되면서 다시 정치적 쟁점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노동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전후개혁으로 탄생한 새로운 일본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평의 노선에는 계급운동의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 군사 동맹 체제를 거부하는 입장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냉전 질서에 대한 의의제기가 노동자 대중의 이익과 결부될 수 있다는 총평과 사회당의 노선은 현실적인 설득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더구나 역코스 이후에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숙련 생산직 노동자 출신 지도자들은 정치적 목표의 달성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의 확보를 우선하고 있었다.

<1955년 체제>하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민당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되면서 춘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실리 추구 위주의 노동운동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교섭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에서는 여전히 정치운동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었으며 좌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총평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는 노동운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즉 자민당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인 총평-사회당 블록이 만들어졌다.

반면에 고도 경제성장과 만성적 노동력 부족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고율의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민간대기업 부문에서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민간부문의 우파 노동운동은 1964년에 동맹(全日本労働總同盟)을 결성하였다. 동맹은 전전의 사회주의 우파 세력과 연결되는 민사당과 정치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총평, 동맹을 막론하고 노사관계 제도의 틀 내부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격렬한 노동운동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타협을 통해 계급갈등을 체제 내부에서 해소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 정상단체별 노동조합원수

(단위: 천인)

6월말	連 合	總評	同盟	全勞	總同盟	産別會 議	新産別	中立勞 連	全勞連	全勞協	其他
1947					759	1,146					4,363
1948					873	1,228					4,432
1949					914	1,020					4,721
1950					835	290	55				4,713
1951		2,921			313	47	69				2,588
1955		3,094		624	237	12	34				2,542
1960		3,707		922	303		41				2,981
1962		4,069	1,184	781	430		50				3,503
1963		4,170	1,344	906	430		49	868			2,900
1965		4,225	1,655				60	967			3,270
1970		4,262	2,047				72	1,378			3,899
1975		4,550	2,257				69	1,359			4,666
1980		4,522	2,155				62	1,340			4,582
1985		4,339	2,154				60	1,549			4,785
1988	5,308	3,969					56				4,146
1990	7,614								835	290	3,896
1993	7,819								856	300	3,944

주: 全勞-전일본노동조합회의, 總同盟-일본노동조합총동맹, 産別會議-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 新産別-전국산업별노동조합연합, 中立勞連-중립노동조합연합회의, 全勞連-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 全勞協-전국노동조합연합회의
 자료: 神代和欣·連合總合生活開發研究所編, "戰後50年産業雇用勞働史、日本勞働研究機構、1995 p.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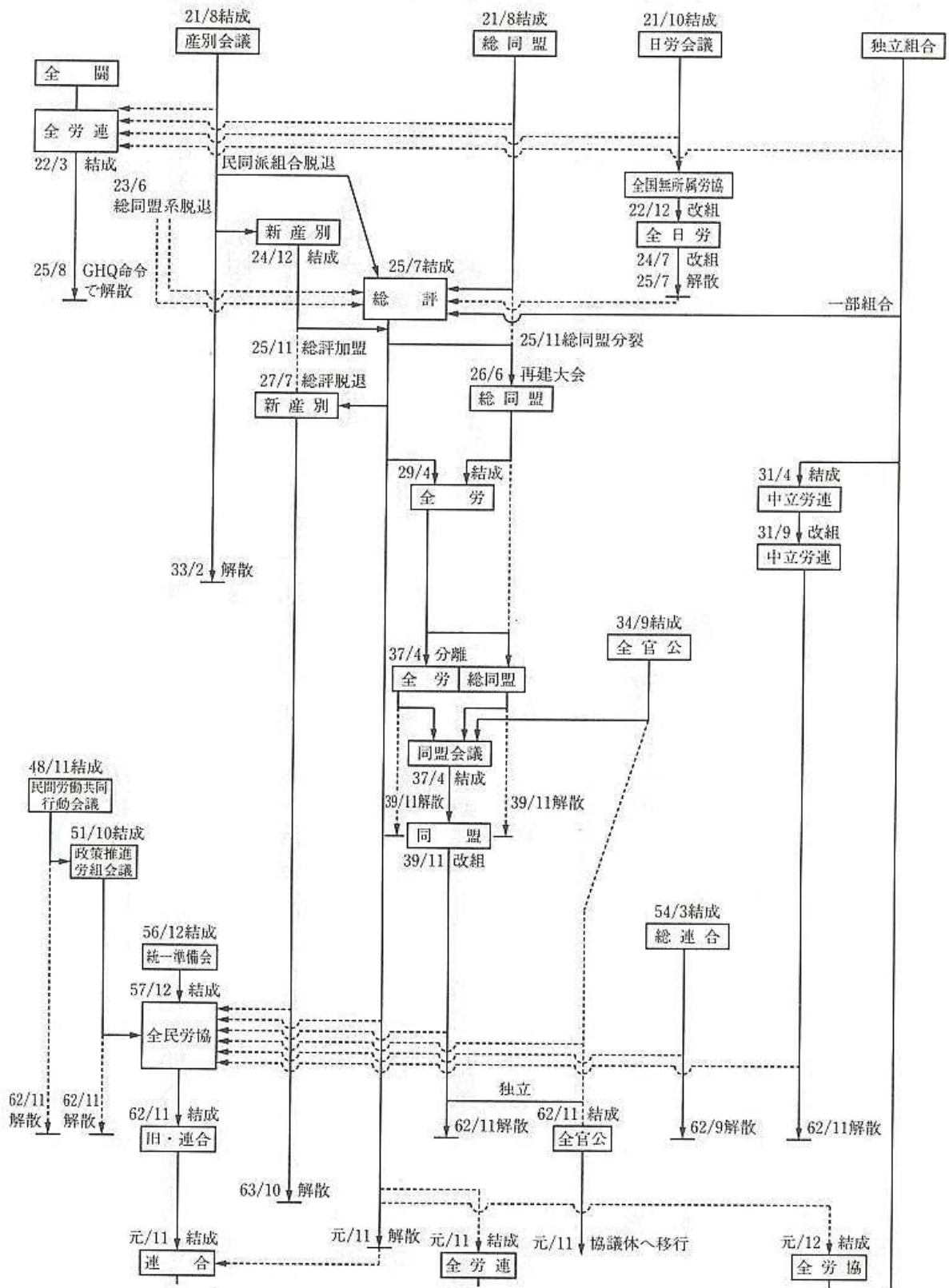
3. 노동운동 조직 통일과 정책참가

춘투로 상징되는 일본의 실리추구형 노동운동은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과 함께 고도 경제 성장의 종언이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 임금 인상을 실적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된 노동조합은 「정책참가」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운동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노사정의 최고 지도자들이 월례 회동을 하면서 제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산업노동간화회(産業勞動懇話會)는 노동대신의 사적 자문기관이지만 석유험기 직후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실제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혁신정당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한계를 느낀 노동운동 세력은 「사적 자문기관」이나 「심의회」에 참가하여 행정부의 정책 형성과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정책참가를 계기로 한 노동운동 조직의 개편 움직임은 민간 부문의 16개 산별 노조가 참가하여 「정책추진노조회의」를 결성(1976. 10. 7)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정책추진노조회의」를 중심으로 한 「노동전선 통일」 운동은 「전민노협」(全日本民間勞動組合協議會), 「연합」(全日本民間勞動組合總連合會)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연합」은 다시 공공부문까지 통합하여 실질적인 정상조직인 「신연합」(日本勞動組合總連合會)로 재출발(1989.11.21)하였으며 총평,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과 같은 다른 전국 단위 정상조직은 해산하였다. 여기서 「신연합」이 현재 「렌고」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일본 노동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 노동운동 세력들은 별도의 정상조직을 결성했다. 공산당의 영향이 강한 「통일로조간」(統一戰線促進勞動組合懇談會, 1974. 12 결성) 계통은 「계급적 전국조직」을 표방하며 「전노련」(全國勞動組合總連合)을 결성했다. 總評에서도 「렌고」에 합류하지 않은 세력들은 「전노협」(全國勞動組合連絡協議會)에 모였다.

그림

노동운동 조직의 추이



자료: <http://www.ksky.ne.jp/~hatsu/chikuro/history/hensen.htm>

렌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신뢰적 노사관계」를 표방하는 민간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되어 정상조직의 통일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정치적 쟁점을 내걸고 있던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퇴조가 있다. 1975년 연말에 「공노협」(公勞企業體等勞動組合協議會)이 쟁의권 탈환을 목적으로 전개한 국철의 8일간의 총파업이 여론과 민간노조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좌절했다. 이는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미 철도파업이 실질적인 위협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행정개혁과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전매, 전신전화, 국철 등의 현업 부문이 민영화되었다. 특히 국철의 분할 민영화과정에서 일본 최대의 노동조합이었던 「고쿠로」(國勞)는 조합원의 대량 이탈로 새로 조직된 회사인 JR(Japan Railway)그룹 내부에서도 소수파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태는 총평과 사회당의 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일본 노동운동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참가의 실질적 내용은 사회복지, 주택문제, 세금, 등과 같이 노동자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렌고의 이러한 운동방침은 경영자 단체, 직장 의료보험 연합회와도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이익연합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렌고는 정부와도 정책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노조가 경영방침을 제안하여 조합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유니온 아이덴티티」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관심 저하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내부 문제로 남아 있다. 정보화와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블루칼라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서비스산업화로 비정규종업원이 늘어나 조직 대상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들어는 문제가 있다. 여성, 외국인, 비정규취업자와 같은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일본 노동조합에게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4 . 60년 안보와 사회운동의 다원화

점령이 끝나고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면서 안보를 유지해 오고 있다.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을 새로운 전쟁에 말려 들어갈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려는 지식인과 시민, 노동운동 세력 등은 대외관계에서 비무장 중립 노선을 선택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전후의 평화헌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지키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전후 일본의 진로에 대한 「헌법체제」와 「안보체제」의 갈등 가운데서 평화운동은 보수정권 비판과 함께 반미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1960년에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 노동단체, 대학생, 지식인 등을 망라한 전국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 5월부터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안보조약 개정 안보 개정을 강행하였다. 안보조약이 연장된 다음에는 급진적인 사회운동은 급격하게 세력을 잃게 되었다. 1960년의 미일안보조약연장반대투쟁은 일본의 사회운동사에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1960년 안보투쟁까지 일본의 사회운동은 적어도 변혁의 주체로 스스로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운동도 1950년대 말까지는 계급주의적 변혁을 지향하고 있었고, 학생운동도 사회변혁을 추구하였다.

이 운동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지만 「안보과동」, 「안보세대」라는 말이 남아 있을 정도로 사회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남겼다. 또한 「60년 안보」는 보수정권과 타협하는 기존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 실망한 청년 세대가 「신좌익」 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신좌익」 운동의 진출은 1960년대 말에 「전공투 세대」가 주도한 학원분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안보투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부터 일본의 사회운동에서는 혁신정당과의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시민운동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60년의 안보투쟁에는 여러 세력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학생운동, 사회당계열의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무당파를 표방하는 시민운동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민들은 특별히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 나름의 직업을 가진 생활인이었다. 이들은 조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참여하였으며 시민운동의 원형을 만들었다.

1960년대에도 노동운동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무당파 시민들에 의한 반전운동, 생협운동등이 활발하였다. 또 학생운동도 정파를 떠나서 대학의 개혁을 내걸고 모였다. 한편 이때 일본의 각지에서는 주민운동이 다수 발생하여 혁신자치체를 출범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의 운동이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면 주민운동은 요구운동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안보투쟁 직후에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당은 <소득이배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압승을 거두었다. 일본은 1960년대에 풍요한 사회가 되었다. 1964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고, 고속철도 신칸센이 부설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해외여행이 허용되었다. 변혁을 꿈꾸던 세력은 약화되고 시민들은 대중문화에 휩쓸려 갔다.

5. 새로운 사회운동과 대학분쟁

1965년에는 한국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일본 내부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교섭은 식민지 침략의 부활이 될 수 있으며 아시아의 냉전적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의 안보투쟁에서 실패한 사회당계열의 운동가가 운데는 시민생활 속에서 운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클럽>운동을 하였다. 이 생활클럽운동은 우유를 공동 구매하는 것을 매개로 시민을 조직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1968년에는 이것이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고도 경제성장은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전국의 무당파 시민들과 주민들은 반공해 운동을 일으켰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도시지역의 혁신자치체를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주민운동도 1973년의 석유위기를 고비로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도 일본의 시민운동은 참여의 요구를 내걸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가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 정부와 협력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흐름도 계속되고 있다.

풍요를 누리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대학이 “청년의 반란”으로 격동하던 1968년은 일본에서도 대학분쟁의 해이었다. 1960년대 말의 학생운동은 혁신정당과 계열화되어 있었던 과거의 학생운동과 질적으로 달라졌다. 60년의 안보투쟁에 가담하였던 젠가쿠렌(全學連)은 준정치조직이며 정당조직의 하부기관이었다. 1969년의 학생운동을 이끌어 온 켄쿄토(全共闘)는 비정당적, 비정치적 학생운동가들의 모임이었다. 혁신정당과 분리된 학생운동은 <全學共闘會議: 全共闘>을 결성하여 학내 투쟁에 몰두하였다. 켄쿄토는 대학의 억압적인 관리와 지배에 반대하여 대학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여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켄쿄토가 주도한 대학분쟁은 1969년의 도쿄대학의 야스다강당 투쟁에서 정점에 달하였지만 이후에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1970년대에도 학생운동 세력은 나리타(成田)공항 건설 반대 투쟁, 피차별 부락 해방운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소수의 분파 운동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켄쿄토 운동을 경험한 세대는 1970년대 이후에 대

규모 사회운동이 사라진 다음에도 각지에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다.

6 베헤렌과 시민운동

196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미군에 대한 후방 군수지원 기지의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가 전쟁에 사용되고, 부상병들이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아직 현재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일본에서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조직인 <베헤렌>(ベヘレン)이 안보투쟁에 혁신정당이나 노조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식인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도 1965년경이었다. 「베헤렌」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시민운동은 「60년 안보」 운동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베헤렌은 종래의 사회운동과 달리 정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형태를 견지하였다. 이 때부터 사회운동이 탈 정당화함으로써 시민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67년 10월에는 시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연합하여 베트남반전통일행동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이후 일본의 평화운동은 대중적 운동으로서의 동원력은 약화되었지만 지식인과 종교인을 중심으로 군사정권하의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정치적인 신조를 이유로 탄압받는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세력은 현재도 전전의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교과서 파동이 일어나거나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될 때 보수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 교과서 문제와 시민사회의 저력

2001년 일본의 고이즈미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과 채택문제로 한일 외교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일본의 일부 우파지식인들이 그들의 과거 동아시아침략의 역사를 은폐하고 미화하기 위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자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형식적인 절차와 논리를 내세워 이를 검정,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이나 양심적인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의 힘으로는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저지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왜곡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전국에서 ‘학습회’와 ‘강연회’를 통해 왜곡 교과서의 채택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각 지역의 풀뿌리 시민운동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교과서 문제’는 이렇게 한국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각 지방의 교원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노조 등이 모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에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여, 전국에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왜곡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게 되었다. 당초 10% 채택을 목표로 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왜곡교과서는 그 채택률이 0.1%에 불과, 시민운동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의 교과서분쟁은 일본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었다. 동시에 각 지역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중앙정부를 직접 움직일 정도의 힘을 발휘하기에는 아

직 역부족이라는 점도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것이 일본의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8 시민운동의 지속성

일본의 시민운동 관계자들은 스스로 세력도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직 일본에는 시민운동을 키울 만큼 시민사회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에 대한 운동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수준의 시민운동은 매우 단단하고 뿌리가 깊다. 일본의 운동가에게는 하나의 영역에 개입하면 일생동안 한 우물만 파는 식으로 운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40년 이상 미나마타병 관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나리타공항건설 반대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학생운동 출신의 주민도 쉽사리 목격할 수 있다. 일본의 시민운동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일본의 시민들이 자기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적인 대의를 위해서 회원이 되고 회비를 내는 일이 매우 적다. 일본의 운동가들은 이것을 한결같이 일본의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조직이 시민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의 구조에서도 가족, 회사와 같은 집단이 개인을 묶어 버리고, 개인적인 행동을 어렵게 하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는 일본의 시민운동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체 등에서 NGO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은 속성상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활동가들은 자기의 수입이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적어도 시민운동의 리더들은 운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리는 경우는 없다. 시민운동은 직업이 아니며, 자원봉사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것은 운동의 확장에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일본의 시민운동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셋째, 일본 정부가 NPO법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넷째, 시민운동이 분산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시민운동간의 협력, 결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XXX네트워크, 000연락회의 등의 연대행동이 많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조직체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섯째, 일본에는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주민운동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운동에 호소하기보다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1960년대 이래 수많은 집단민원의 사건들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축적되어 시민운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법,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시민운동의 합리적인 운용방식도 매우 발달하였다. 적은 운영자금으로 큰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철저한 합리화, 절약, 자원봉사, 자원의 재활용 등 한정된 운동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경제적인 조직 운영방법이 일반화되었다.

9 반핵평화운동

전후 일본에서 반핵운동과 평화운동은 노동운동이나 주민운동과 같이 가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대중 동원에 성공해 온 가치지향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이다. 일본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는 전후개혁기에 등장한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키워드였으며 신헌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였다.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냉전 체제에 편입시켜 가는 보수정권에 대한 이의제기 행동이 되어 갔다. 평화운동은 미일안보 동맹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인권탄압, 등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핵」은 일본이 세계 유일의 핵무기 공격을 받은 나라이며 이러한 비극의 재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회운동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핵운동은 핵병기만이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성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일본에서 현재도 가장 큰 대중적 동원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운동을 이해할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공격을 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체험, 「피폭자」 등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말이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의 하나이며 그날의 비극을 모든 TV 방송이 하루종일 되새기며 비인도적인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한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은 핵공격으로 일본이 당한 피해를 부각시키는 내용의 캠페인이 전개되지만 전쟁이 시작된 과정이나 일본군이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한 언급은 회피되고 있다.

일본에서 핵무기에 대한 문제가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계기는 미국이 남태평양에서 실시한 핵실험의 방사능 낙진에 오염된 선원들이 피폭 증세를 보인 참치잡이 어선 「제 5 후쿠류마루」(第5 福龍丸) 사건(1954. 3)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東京 스기나미(杉並)구의 주부단체가 시작한 원수폭 금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어 같은 해 8월에는 「원수폭금지 서명운동 전국협의회」로 발전했다. 1955년 8월에는 히로시마에서 「第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열리는 성과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9월에는 「원수협」(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이 결성되었다. 당시에는 대중의 열기가 운동 조직보다 앞서서 분위기였다.

그러나 「60년 안보파동」을 거치면서 「원수협」이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 반발한 보수파 인사들이 이탈하였으며 민사당과 「전일본노동조합회의」 계통의 단체들도 핵금회의(核兵器禁止平和建設國民會議)를 결성하여 분리해 나갔다. 또한 「원수협」 내부에서도 공산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어떠한 국가의 원수폭에도 반대」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당·총평 등의 13개 단체가 이탈하여 「원수금」(原水爆禁止日本國民會議)을 결성(1965. 2)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진영이 보유하는 핵병기를 규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결국 일본의 원수폭 금지 운동은 이상의 세 갈래로 분열하여 대립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중립적인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원수금」, 「원수협」이 합동으로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1986년부터 다시 분열하였다. 이후에는 「원수금」, 「원수협」, 「핵금회의」만이 아니라 일본생활협동조합연(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會)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반핵운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10 비핵 삼원칙

핵공격을 체험한 일본 사회에는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어 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삼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외교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있는 제일 미군 기지와 군함의 동정을 감시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시마

(三島)시 평화도시 선언결의」(1959. 12), 「핵병기 적재함정의 고베(神戸)항 입항 거부에 관한 決議」(1975.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 수준에서부터 핵무기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는 움직임이 출발하였다. 세계 최초로 지방의회가 비핵도시 선언을 한 곳은 아이치현(愛知縣) 한다(半田)시(1958. 6)였다. 영국의 「만체스터 비핵도시선언」(1980. 11) 이후에 세계적으로 지자체의 「비핵선언」이 확산되어 2,700 이상의 지자체가 동참하였다. 일본 내부에서 「비핵 자치체 선언」 참가 지역은 1998년 7월 현재 2,354개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비핵선언자치체협의회」가 조직되어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세계 평화 연대 도시 시장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비핵 삼원칙」 가운데 특히 핵무기 반입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지자체나 시민의 항의운동에 대해 일본 정부나 미군은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 「NC, ND」로 일관하고 있다.

미소의 냉전이 지속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상존할때는 1980년대에 유럽지역에서 고조된 반핵 운동에 호응하여 일본에서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군축과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이 고조되었다. 수십만명 단위의 집회가 열리고 1982년 6월에는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 8,200만명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기도 했다. 1987년에 INF(중거리 핵미사일) 폐지 조약이 미소간에 체결된 다음에는 위기감이 완화되어 일본의 운동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충격을 미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하여 일본에서도 반핵 평화운동이 원자력 발전소 반대와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반핵 운동에서도 혁신계 정치세력간에 보조가 맞지 않는 문제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대중동원형 운동에 거리를 느끼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가동되는 운동조직의 형태를 보면 소규모 집단을 이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다극분산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집단은 쟁점에 따라 느슨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11 자원봉사

1995년 1월에 고베-오사카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약 5천 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도시전체가 파괴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전개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지역행정기관의 움직임보다도 신속하였고, 그들의 구제활동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의 붐은 1995년을 전후하여 캄보디아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일본의 자원봉사들의 해외활동은 매우 두드러졌다. 일본해외자원봉사센터(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JVC)는 1980년에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원조하는 하는 단체이다. 2000년현재 약 36억엔을 모금하여 인도차이나지역, 중국, 중동지역의 빈민원조, 자원봉사자 파견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한 일본의 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AICA)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자를 참가시키고 있다. 자원봉사는 지금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훈련하고, 또 수요를 개발해서 파견하기도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양하다. 복지영역, 환경보전, 국제지원, 사회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 재해, 사막화와 같

은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사회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여 일본어의 교육, 의료지원, 상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12 NPO와 시민운동의 제도화

1998년에 일본정부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라는 NPO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해 일본의 비영리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등록을 하여 합법적으로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복지와 사회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2002년 1월 현재 전국에 5,779개이며, 대부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있다. 이들 단체 가운데 보건, 의료, 복지 등의 복지관련(60%), 사회평생교육(40%), 마찌즈쿠리사업(37%), 문화예술진흥사업(27%), 환경보전(27%), 국제활동(24%), 어린이활동지원관련(34.1%), 인권평화(15.0%) 재해지원활동(7.8%), 지역안전활동(7.7%), 기타 단체지원활동(35.9%)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NPO라고 하면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비영리(non-profit), 비정부(non-governmental), 공식적(formal), 자기통치(self-governing, 자발성(voluntary)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http://www.npo-jp.net/>). 미국의 NPO가 주로 세법상 비과세대상인데 비해 일본의 NPO는 비과세대상일뿐아니라, 자율적인 비정부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형식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관, 사무실, 운영요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등록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시민단체 가운데는 NPO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NPO법의 시행으로 일본의 크고 작은 시민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어, 한편에서는 시민참가가 제도화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활동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복지분야, 사회교육, 환경보전, 국제화, 마찌즈쿠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시민이 참가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제도화는 행정참가를 확대하였지만 시민운동을 정치세력으로 성장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3 마무리

-거품경제와 사회의식의 보수화 -

일본에서는 노동운동의 체제내화가 진행되었고 체제의 선택과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풍요한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신사회운동이 정착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서면서 일본은 <거품경제> 시대를 맞이하였다. 대학의 학생운동은 변혁의 잠재력을 상실하고, 노동운동도 협조적 노선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한편 나카소네수상은 미국

의 레건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군사예산을 팽창시키고, <야스구니신사>참배를 강행하여 군국주의를 긍정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1990년대에는 소련,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의해 일본의 사회운동은 큰 충격을 받았다.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하였던 사회당이 거의 몰락하게 된 것도 이러한 충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타고,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 <주변사태관련>의 법제화 등이 추진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와 제도 정치권은 전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 정세의 변화를 빌미로 하여 국가적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보수주의와 내셔널리즘의 등장에 대해 일본의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양심세력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테마연구: 히바쿠샤 (被爆者) (Hibakusha)

- 히바쿠샤(被爆者)는 구체적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공격을 받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일본에서 핵실험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되는 사고를 겪은 사람은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曝」자를 사용해 被曝者로 표기한다. 현재도 약 34만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생성 자료 (1985 조사, 1990 발표)에 의하면 히바쿠샤의 사망이 늘어 원폭에 의한 사망자의 총수는 29만 6천명에 달하고 있다. 원폭 피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히바쿠샤의 국적도 20개국 이상이다. 1991년에는 나가사키에서 해마다 원폭이 투하된 날을 상기하는 기념행사에서 발표된 평화선언 가운데 처음으로 연합군 포로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과 사죄가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원호의 필요성이 호소되었다.

- 일본의 히바쿠샤들은 「일본피단협」(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을 조직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7년에 「원폭의료법」을 제정하여 히바쿠샤에 대한 건강진단과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나 당시에 생활 문제에 대한 원호 대책은 누락되어 있었다. 1968년에는 「피폭자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지만 지급 조건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제외되는 히바쿠샤가 많았다. 1981년 6월에는 이 법이 개정되어 의료 특별수당 제도가 만들어지고 소득에 따라 수혜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피단협」은 고령화되는 히바쿠샤의 실정에 맞추어 1973년부터 국가 보상의 정신에 입각한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은 법안을 1974년과 1994년 두차례에 걸쳐 참의원에서 가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히바쿠샤의 개념은 영어권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정도로 일종의 정당성을 획득했다. 히바쿠샤의 호소가 거둔 핵전쟁의 공포와 비인도성을 널리 알리는 계몽적 효과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징병·징용으로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핵공격을 받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히바쿠샤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을 흐리게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읽을거리>

노마 필드,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박이엽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95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일본의 근현대 사회사』(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32집),
문학과 지성사, 1991

김경동 편,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영혜,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2004

박원순, 『박원순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아르케, 2001

<참고문헌>

似田貝香門・梶田孝道・福岡安則, 『リーディングス 日本の社會學 10 社會運動』,
東京大學出版會, 1986